
산림청 업무보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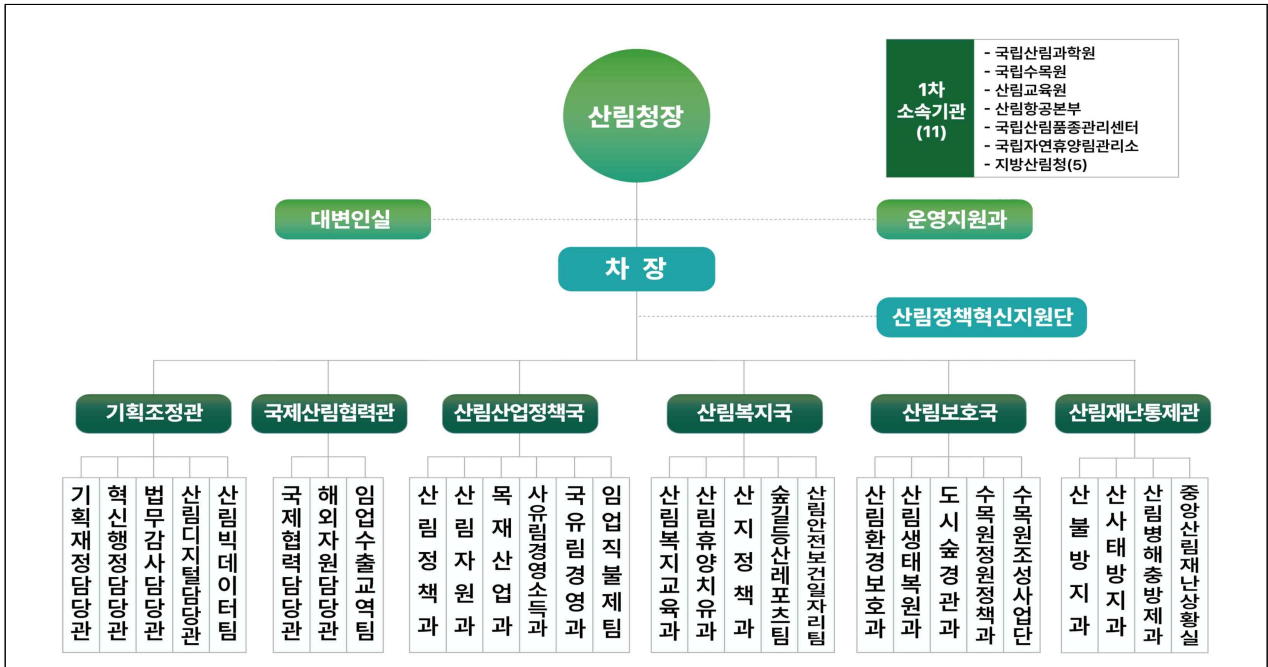
2025. 12. 11.

목 차

I. 일반현황	1
II. '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	2
1. '25년 성과 및 보완점	2
2. 향후 업무추진방향	4
III. 중점 추진과제	6
1. 산림재난 총력 대응체계 구축	6
2.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의 역할 강화	10
3. 임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	12
4. 산림 활용 탄소감축 및 생물다양성 증진	14
5. 찾고싶은 산촌 조성으로 지역상생 기여	16
IV. 주요 쟁점이슈	18
1. 산림사업 공개경쟁 확대 및 품질 제고	18
2. 산림경영의 재난 안전성 강화 및 신뢰성 확보	19

I. 일반현황

1 기구 및 조직 현황 ※ (본청) 3관 3국 24과 6팀 / (소속기관) 1차: 11개, 2차: 43개



2 인원 현황 ※ 정·현원: 1,790명

(‘25.11월 말 기준)

구분	직급별	계	정·현원							기타
			정무직	고공단	3.4급	4급	4.5급	5급	6급이하	
합계	정 원	1,790	1	17	8	29	29	158	1,285	263
	현 원	1,790	1	16	8	28	23	163	1,252	299
본청	정 원	330	1	7	6	18	21	94	174	9
	현 원	354	1	6	5	20	19	98	192	13
소속기관	정 원	1,460	-	10	2	11	8	64	1,111	254
	현 원	1,436	-	10	3	8	4	65	1,060	286

3 예산 현황 ※ '26년 예산은 3조 260억원으로, '25년 대비 15.6%(4,090억원) 증가

(단위: 백만원, %)

구분	2025 예산 (A)	2026년 예산 (B)	증 감 (B-A)	(B-A)/A
계	2,616,930	3,025,967	409,037	15.6
산림재난관리	804,892	1,161,395	356,503	44.3
기후변화대응	1,054,473	1,096,873	42,400	4.0
산림산업육성	232,812	254,318	21,506	9.2
국민복지증진	208,801	214,803	6,002	2.9
국제산림협력	43,983	40,524	△3,459	△7.9
산림행정운영	248,262	258,054	9,792	3.9
※ 완료사업	23,707	-	△23,707	순감

Ⅱ. '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

① '25년 성과 및 보완점

[1. 정부 출범 이후 주요성과]

- (산불대책) 선제적·압도적 범정부 산불 예방·대응 태세 강화
 - 국가 총력 산불 대응을 위한 범정부 「산불 종합대책」 마련(10월) 및 진화 자원 통합 운용*을 위한 ‘범정부 산불진화자원 운용 협의회’ 출범(9월~)
 - * 헬기: (3월) 216대 → (11월) 261대 → ('26) 320대 예정(104대↑) / 320대 중 軍 헬기 143대
 - 관계부처 합동 진화 역량 강화를 위한 산불진화 통합훈련 확대(1→2회)
 - * 산불진화 통합훈련(10.22, 국무총리 참석), 산불진화 관군 합동훈련(11.6, 대통령 참석)
 -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확대('24: 166천톤 → '25: 201천톤) 및 민가 주변 산불 안전공간 조성 확충('25: 20개소 → '26: 120개소) 예산 확보
- (피해복구) 재해지역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신속 복구 및 일상 회복 지원
 - 생활권 주변 피해지 응급복구 완료(산불 - 6월 우기 전, 산사태 - 9월)
 - 「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 제정(10.28.) 및 차질없는 법 시행('26.2월)을 위한 하위법령(안) 마련
 - 피해 임가(林家) 재해복구자금 금리 인하(0.5%p↓), 산림청 정책자금 전체에 대한 상환연기, 이자감면 등으로 임가 경제부담 완화
- (국민소통) 산림경영 혁신 및 쟁점 해소를 위한 이해관계자 대화 지속
 - 새 정부 정책기조 반영을 위한 ‘산림정책혁신위원회’(9~12월) 구성·운영
 - 국무회의, 국회 토론회 등 계기 주요 산림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과학적 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산림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중

- (경영지원)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여건 조성 및 산업재해 방지 강화
 - 임목벌채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(6백만 원 → 3천만 원), 임업직불금 지급 확대('24: 503억 원 → '25: 516억 원) 등 임가 민원 해소 및 지원 강화
 - 임업재해 저감 추세* 유지를 위한 산림사업장 전수 안전점검(8~9월) 실시 및 「산림사업 안전관리 종합대책」 마련(10.23.)
 - * 임업재해율(임업재해자 수 / 임업근로자 수): ('21) 0.86% → ('24) 0.63%
- (국민행복) 수요자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확산으로 수혜자 확대
 - 5개 시·도, 21개 시·군에 걸친 '동서트레일'('27 전면개통) 시범운영(10~11월)
 - 산불피해 주민(1.3천명) 및 산불 대응인력(4천명)의 심리회복을 위해 산림치유 및 국가트라우마센터 협업 프로그램 지원
 - 산림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활권·도심권 산림교육·치유시설 확충*
 - * 국립 금산 자연휴양림(8월),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(11월), 국립 김해 숲체원(12월)

[2. 주요 보완점]

- (산림경영) 산림사업의 과학적 근거 보강, 투명성 제고 등 근본적 혁신 필요
 - 조림, 숲가꾸기, 임도 등 주요 산림사업에 대한 전과정 모니터링으로 문제점 발견·해소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
 - 능력있는 참여자의 건전한 시장경쟁 구도 조성으로 산림사업 혁신
- (산불대응) 부처 합동 「산불 종합대책」의 현장 작동성 강화 필요
 - 중앙-지방 협력 주민 대피·현장 지휘체계 개선 및 산불진화자원 확충
 - 선제적·압도적 산불진화 자원 투입 등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 강화

② 향후 업무추진방향

[1. 산림정책 추진 여건]

- (국민안전) 고온·건조, 돌풍 등 극한 기상 및 연료물질 증가로 올해 역대 최대 산불피해* 발생, 극한 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 또한 증가 추세**

* 산림 10.4만ha, 인명(사망·부상) 187명 등 / ** 연평균 산사태: ('15~'19) 521건 → ('20~'24) 2,232건

⇒ 기후재난이 일상화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·재산 보호를 위한 '선제적·압도적 산림재난 예방·대응' 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시급

- (국민행복) 휴양, 치유 등 산림복지 수요는 증가* 추세이며, 산림은 생활환경 개선, 자살 예방, 여가 활동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

*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 수: ('19) 2,626만 명 → ('24) 3,160만 명

⇒ '국민 녹색행복 시대' 실현을 위해 산림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필요

- (임가경제) 임가소득은 소폭(2.7%) 상승하였으나 농·어가에 비해 낮고*, 영세·부재 산주 비율이 높아** 산주의 경영 참여가 저조한 상황

* '24년 소득(백만원): (어가) 64 > (농가) 51 > (임가) 38 / ** 3ha 미만 영세산주 86%, 부재산주 56%

⇒ 인프라 조성, 소득 보전, 교육·컨설팅 등 전방위적 임업인 지원으로 '산림녹화 시대'에서 '산림경영 시대'로의 전환 필요

- (기후위기) 우리 숲은 연령 증가에 따라 탄소흡수량이 감소*하고 있으나 국제사회는 산림 활용 탄소흡수·생물다양성 보전 정책을 확대

* 31~50년생 나무가 전체 산림 67% 차지 / 연간 흡수량: ('22) 39.8백만tCO₂ → ('30 전망) 22.5백만tCO₂

⇒ 보호할 산림은 보호하고, 가꾸어야 할 산림은 가꾸어 생물다양성과 탄소흡수 능력을 증진하고 '나무의 시대'에서 '목재의 시대'로의 전환 필요

- (지역소멸) 산촌은 국토의 43%를 차지하지만,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가속화*

* 전체 산촌 읍면 중 소멸고위험 지역 비율: ('16) 65.7% → ('19) 79.0% → ('24) 90.4%

⇒ 국민 수요 맞춤형 산림휴양·관광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제공으로 산림을 '지역상생 핵심 자원'으로 육성·활용 필요

[2. 산림청 주요업무 추진방향]

비 전

사람을 살리는 숲, 숲을 살리는 국민

목 표

산림재난 인명피해 '제로화'
산림활용 국민행복 '극대화'
산림사업 안전사고 '최소화'

중점 추진과제

- ① [국민안전 수호] 산림재난 총력 대응체계 구축(국정과제 73)
- ② [국민행복 증진]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의 역할 강화
- ③ [민생경제 회복] 임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
- ④ [기후위기 극복] 산림 활용 탄소감축 및 생물다양성 증진
- ⑤ [지역소멸 대응] 찾고싶은 산촌 조성으로 지역상생 기여

+

주요 쟁점 해소

- ① 산림사업 공개경쟁 확대 및 품질 제고
- ② 산림경영의 재난 안전성 강화 및 신뢰성 확보

Ⅲ. 중점 추진과제

① [국민안전 수호] 산림재난 총력 대응체계 구축(국정과제 73)

[1.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산불 대응 혁신]

□ (총력진화) 선제적·압도적 초동대응을 위한 산불진화자원 투입

- 산불 발생 시 범부처 공중·지상 진화자원 즉시 출동 및 기관 구분 없이 산불발생지 인근 최단거리(50km 이내) 가용헬기 투입

* 산림청, 지방정부, 소방청 등 진화 인력·자원을 신속히 투입하여 산불 초동 진화

- 산불대응 단계를 단순화하고, 대형산불 우려 시 규모와 상관없이 산림청장이 즉시 통합 지휘하여 초기부터 다량의 진화자원 투입

* 대형산불 우려 시 규모와 관계없이 산림청장이 조기 개입·지휘하도록 추가 개선방안 논의

- 산불 유관기관의 진화자원 동원을 위한 「산림재난방지법」 개정 추진

* (현행) 협조 → (개선) 「재난관리자원법」 제52조에 따른 동원, 상시 출동태세 유지 등

□ (예방혁신) 산불예방 활동 강화로 산불 발생 가능성 선제적 차단

- 민가 주변 산불 안전공간(이격거리) 조성 확대('25: 20개소 → '26: 120개소) 및 전국 산림에 대한 산불 위험도 평가 신규 도입*

* 산불 위험도 평가·위험지도 구축 → 위험지역 실태조사(매년) → 민간 공개(온라인 포털)

- 통상 2~3월에 집중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가을철 수확기 이후로 확대하고, 범부처 합동 파쇄 지원으로 소각산불 원인 차단

* '전국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' 운영(11월, 2월 / 연2회)으로 자발적 파쇄 유도

- '산불조심 주간'(3월 첫째 주, 案)을 운영하여 산불 예방의식 고취

* 산불예방 캠페인, 안전산행 챌린지, 산림 인접 인화물질 제거 등

□ (역량강화) 산불 확산예측 고도화 및 정예 산불진화 인력·장비 확충

- 산악지형 특성을 반영한 고해상도 산악기상예보 데이터 생산, 산불 현장에 맞는 기상정보 반영* 및 AI 활용으로 확산예측 정확도 제고

* (기존) 평지 평균풍속 → (개선) 수치예보모델 평균 및 최대 순간풍속, 산악기상 풍속(26)

- 산림헬기는 소형 헬기를 중·대형 헬기로 교체·확충*하고, 노후 기체가 많고 조종사 연령이 높은** 임차헬기 운영 개선

* ('26) 50대(대형8, 중형32, 소형10) → (~'30) 60대(대형19, 중형41) → (~'35) 70대(대형19, 중형51)

** 지방정부 임차헬기 87%(69대)가 기령 21년 이상 / 조종사 평균나이 62세('25년 기준)

- 기동력 및 담수량이 우수한 산불진화차량* 및 산불진화대원** 확충

* 고성능 진화차량: ('25) 29대 → ('26.上) 32대 / 다목적 진화차량: ('26.上) 64 → ('26.下) 76대

** 공중진화대: ('25) 104명 → ('26.上) 200명 / 특수진화대: ('25) 495명 → ('26.下) 555명

- 산불·산사태·병해충으로 분산된 재난대응 인력을 산림재난대응단*으로 통합운영('26~, 9,272명)하고 '국립 산림재난안전 교육훈련센터' 설립

* 산불예방진화대+산사태현장예방단+병해충예찰방제단 →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(연중)

□ (대응체계) 산불의 국가책임 강화 및 실효성 높은 주민 대피체계 구축

-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앙사고수습본부 상시 운영체계 마련 및 권역별 국가산불방지센터 조성(2개소)으로 산불현장 통합지휘 지원

* 중수본 내 국가산불대응상황실 설치: (주관) 산림, (참여) 행안·소방·軍·경찰·기상·국립공원 등

- 주민 대피계획 수립 의무화(「산림재난방지법」 개정 추진) 및 초대형·초고속 산불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훈련 실시

* 상황별 이동경로, 지방정부·경찰·소방의 이송 지원 등 대피계획의 실효성 확보

[2. 위험지역 예방 집중, 정밀·신속 대피로 산사태 인명피해 예방]

□ (예방사업)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및 취약지역 중심 예방사업 확대

- 사전조사('25: 53천 개소 → '26: 63천 개소) 결과를 반영하여 **산사태 취약지역 신규 지정 및 산사태취약지역 내 사방사업 집중**

* 산사태취약지역 내 사방사업 집중률: ('24) 40% → ('25) 50% → ('26) 60%

- 극한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**계통적·유역완결형 산림유역관리사업 확대**

* 산림유역관리사업: ('25) 28개소 → ('26) 138개소(5배 ↑)

< 계통적·유역완결형 산림유역 관리사업 >

산지사면의 침식방지, 계곡(주계류, 소계류)의 유량 조절 등을 위한 사방시설이 연계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유역단위 사방사업 실시

* (예시) 사방댐·골막이·수로 등을 계곡 전체에 걸쳐 체계적·유기적 배치



- 민간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**토석류 방호벽 설치 시범사업 추진**

* 산림 인접 및 계곡부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 등 토석류 예방을 위한 방호벽 시범 설치

□ (주민대피) 산림재난 위험지역 선제적 주민대피 체계 구축

- 대피지구 지정, 대피로 정비 등 **대피계획 수립 의무화**(「산림재난방지법」 개정)

* (산림청) 주민 대피계획 수립 표준(안) 작성·배포 → (지방정부) 주민 대피 세부계획 수립

- **접경지역 군부대 및 주민 대상 산사태 위험정보 제공 확대**

* 산사태예측정보 제공 지역 확대 및 군 막사, 초소 등 예방사방 실시

□ (시민협업) 주민 참여형 능동적 산사태 재난 대응 확산

- 산사태 등 위험지역 산사태 예방을 위한 **사방사업 주민참여 확대**

* “주민참여 사방사업 대상지 찾기 공모” 확대(다중이용시설 등)

* 사방댐 유지·관리를 위한 “(가칭)우리 동네 사방댐은 안전한가? 캠페인” 추진

- 누구나 산사태 위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**정보 접근성 제고**

* ‘스마트산림재난 APP’을 활용하여 산사태 예측정보 및 위험도 대국민 제공

[3. 스마트 방제 기반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패러다임 혁신]

□ (기술개발) 근원적 방제를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술 고도화

- 친환경 살충제·기피유인제, 라이다·AI 활용 자동예찰 체계 및 예측분석 모델 구축 등 기술 개발·적용 확대

* 살충제 개발을 위한 매개충 유전자 분석, AI 활용 감염 의심목 선별 자동화 등 기술 개발

- 소나무재선충병 내병성 품종 선발기간 단축을 위한 유전자 마커 개발(~'27) 및 우수 선발개체를 활용한 시범림 조성(~'30)

- 반복·집단 피해지에 대해서는 수종전환 원칙을 적용하고, 수종전환 방제 참여 산주들에 대한 지원제도 도입*으로 방제 효과 제고

* 참여 산주에 대한 선택형 직불금 지급 등 지원제도 도입

□ (협력강화) 전략적 방제를 위한 중앙-지방정부 협업 내실화

- 연접 기관(국유림관리소-시·군) 간 방제협의회 운영* 활성화로 국가 선단지, 청정지역 전환 대상지 등 중요지역 공동방제 확대

* 중요지역 방제 시 인력, 예산 등 가용자원 및 드론, 지상정밀 활용 예찰·분석 지원 등

- 유기적 방제 협력을 위한 국가 및 광역 시·도 방제전략 수립 법제화

* 국가방제전략·광역 시·도 방제전략('26~'30), 시·군 실행계획(매년)

- 피해 경미지역은 3년 내 청정지역 전환을 목표로 시·군별 로드맵 수립

* 피해고사목(감염목) 1천 그루 미만 시·군구 대상 교육·컨설팅 실시 및 방제자원 우선 배정

□ (품질향상) 책임방제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로 방제 효과성 제고

- 방제 품질 평가 제도·시민 감시단 도입 및 현장 특임관 확대

* 우수사업자 홍보 및 타 지역 사업 참여 확대, 미흡 사업지 사법처리 강화 등

② [국민행복 증진]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의 역할 강화

[1. 국민 심신 회복을 위한 산림치유 확대]

- (정신건강) 산림치유로 자살 예방, 우울증 완화 등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
 - 정신건강 위기 대상별 특화형* 산림·정원치유 프로그램 운영
 - * (자살) 고위험군(시도자, 유족), 잠재적 위험군(학폭피해 청소년, 독거노인 등) 대상 (난임·산후우울) 중앙난임센터, 공공산후조리원 연계 찾아가는 산림치유 확대
 - 범정부 자살예방추진본부를 통해 부처 협업형 산림치유 사업 발굴·확산
 - * (사례)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과 함께 산림치유를 통해 재난 경험자의 일상회복 지원
- (신체건강) 만성질환 관리, 치매 예방 등을 위한 산림치유-의료 연계 확산
 - 당뇨, 고혈압 등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국민 대상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
 - * 국민건강보험공단 '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' 연계 산림치유 운영: 산림치유원, 치유의 숲 등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 이수 → 현금화 가능한 '건강실천포인트' 지급
 - 고령자 치매 예방, 암생존자 건강관리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
 - * 중앙치매센터(치매안심센터), 국립암센터(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) 등과 협업
 - 임산물 활용 '식(食)치유' 서비스 도입으로 산림치유 혜택 확대
 - * 산림치유 음식 발굴 및 치유 효능 검증, 사회복지시설 등 보급, 전문인력 교육 등
- (기반확충) 숲으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서비스 구축
 - 일상 속에서 쉽게 이용가능한 도심형·거점형 산림복지 기반 확충
 - * (도심형) 접근성이 우수한 도심권 국립치유의숲(울산·대구·부산) 신규 조성 (거점형) 자연휴양림(23개소), 숲속야영장(34개소), 산림레포츠센터(3개소) 등 확대(~'30)
 -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ESG 협력을 통한 산림복지 일상화
 - * 사립 산림복지시설, 민간기업 등과 ESG 협력과제 발굴 ⇒ 산림복지 접근성 향상

[2. 생활 속 녹색공간 확충과 활용으로 녹지 형평성 제고]

□ (도시숲) 녹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

- 도시숲 정책 패러다임 전환(양적 확대 → 질적 관리)을 위하여 해외 사례*를 토대로 우리 여건에 맞는 ‘3-30-300 규칙’ 적용방안 마련

< 3-30-300 규칙(캐나다 UBC 세실 코니넨딕 교수, 2022) >

모든 주택, 교육시설, 직장에서 나무 3그루를 볼 수 있어야 하고, 주변 지역 30% 이상이 나무 그늘로 덮여있어야 하며, 300m 이내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최소 0.5ha 이상의 녹지가 있어야 한다는 ‘3-30-300 규칙’ 제안

- 녹지 혜택을 골고루 누리도록 구도심 위주 도시숲 공급 시범 적용
* (사례)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: (종로구) 53.3m², (동대문구) 2.3m² ⇒ 편차 해소 필요
- 폭염, 미세먼지 등 기후재난 대응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도시숲 조성
* 기후대응도시숲 126ha, 도시바람길숲 15개 시·도, 자녀안심그린숲 37개소(‘26)

□ (정원) 도심 속 녹색 생활공간 확충을 위한 생활정원 조성

- 공공·다중이용 시설, 국·공유지 등 활용 실외·실내·옥상정원 확대
* 생활정원 누적 개소수: (‘25) 456개소 → (‘26) 527개소
- 도심 속 탄소흡수원 확산을 위해 탄소흡수력이 높은 식물과 탄소 저장고인 목조건축물을 설치한 생활 속 탄소정원 모델 구축
- 트렌드 분석으로 유형별 정원 표준 모델 및 관리 매뉴얼 개발·보급
* 공기정화, 폭염쉼터 등 다기능 신유형 정원모델 시범 조성(3개소)

□ (가로수) 지역 특색 반영 가로수 조성·관리로 도시환경 개선 및 지역 명소화

- 가로수길을 활용한 도시환경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
* (사례) 서울 삼청동 은행나무길양재천 벚꽃길, 담양 메타세콰이어길, 전주 객리단 이팝나무길 등
- 건강한 가로수길 조성을 위한 가로수 관리강화 및 우수 가로수길 선정

③ [민생경제 회복] 임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

[1. 양질의 산림일자리 창출 및 안전사고 없는 근로환경 조성]

- (일자리 확대) 숲가꾸기 등을 활용한 질 좋은 국민 일자리 창출
 - 공공산림가꾸기 단가 현실화를 통한 수익 안정화로 청·장년층 참여 확대
 - * 직접사업으로 전환하고 기본급 외 수당(식비, 가족수당, 명절휴가비 등) 및 출장비 지급
 - 계절·한시 일자리를 연중 일자리로 전환하여 일자리 질 개선
 - * 산불·산사태·병해충 → 산림재난대응단 통합·운영, 자격수당 신설로 전문성 강화
 - 산림분야 청년 인재 육성, 창업지원 등으로 좋은 청년 일자리 확충
 - * 현장 수요를 반영한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 거버넌스 구축, 청년기업 사업화 지원 등
- (제도개선) 체계적 사업체·기술자 관리로 산림사업의 건전한 발전 지원
 - 산림사업 품질향상과 법인 운영 지원을 위한 산림기술법령 개정
 - * 임금단가·품셈 현실화를 위한 '품셈관리기관' 지정, 법인관리 실무매뉴얼 수립 등
 - 자격대여·이중취업 단속 강화, 반복 부실행위에 대한 가중처벌, 벌점 감경제도 보완 등을 통해 부실업체 배제 및 건전업체 확산 유도
 - 양질의 산림기술자 육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·경력제도 강화
 - * 교육훈련 이수기준·인정범위·절차 정비, 기술자경력 산정방식 개선 등
- (안전관리) 산림 내 근로 현장 관리 강화로 안전한 일자리 환경 조성
 - 안전수칙 미준수 등 법령 위반에 대해 효과적 제재 수단* 마련 및 재해 발생률이 높은 벌목작업 안전사고 예방대책** 중점 추진
 - * 과태료 부과 확대, 중대재해 발생 시 영업행위 제한, 부정당업자 지정 등
 - ** 임업기계장비 우선활용, 벌목작업 허가조건 자격강화(기술자 또는 의무교육 이수)
 - 근로감독, 안전교육, 지도점검 등 산림현장 안전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고용노동부, 산업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 강화
 -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등 작업자 안전사고 저감 환경 조성

[2. 임업인 경영 여건 개선 및 산주소득 증진]

□ (제도혁신) 임업 진입장벽 해소 및 산주의 임업경영 참여 촉진

- 신규·청년 임업인의 산림경영 참여 지원을 위해 산지은행 제도 도입
* 산지은행 제도 운영, 전담조직 설치 등 세부사항 법제화 추진('26~)
- 기후위기에 강한 스마트임업을 확산하고, 청년들이 초기 자본 부담 없이 조경수·산나물 등을 재배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 신규 도입
- 산림경영 의욕 증진을 위해 임업계 요구를 반영하여 임업에 사용되는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·증여세·상속세 감면 혜택 제공

□ (소득안전망) 임업직불제 개선 및 규제 산지 손실 보상 체계 마련

- 임업직불제 지급 단가를 농업 수준('25 받농업)으로 현실화하고, 면적·매출 등 지급 요건을 완화하여 농업과의 소득 격차 해소
- 밀원수 식재, 산림경관 조성 등 산림의 생태적·사회적 기능을 확산하기 위한 임업분야 선택형 직불제 신규 도입
* 친환경 임산물 생산, 밀원수·경관수종 식재·관리 등 세부사항 법제화 추진('26~)
-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산림보호구역 산주의 재산권 침해를 보상하기 위한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* 도입('26)
* 산림보호 활동에 대한 지불금 지급(약 3만명, 9만ha) / 「산림보호법」 개정 추진 중

□ (기반강화) 임산물 생산 기반 강화 및 성장 단계별 전문 인력 육성

- 임산물 생산단지 및 복합경영단지의 규모화·현대화를 통해 임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, 시장 가격 경쟁력 제고
- 전문교육기관(55개소) 지정·운영 및 수요 맞춤형 교육 실시, 산주의 단계별 성장(진입→경영→전업)을 위한 원스톱 지원 플랫폼 구축

④ [기후위기 극복] 산림 활용 탄소감축 및 생물다양성 증진

[1. 국내외 산림의 탄소흡수 확대 및 생물다양성 보전]

- (국내) NDC 달성을 위한 체계적 산림관리 및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
 - ‘심고-가꾸고-베고-이용하는’ 산림 선순환 경영 활성화, 기후재난에 강한 혼합림 조성, 산불피해지 복구 등으로 산림탄소흡수력 유지·증진
 - * 산불피해지에 탄소흡수력 높은 활엽수 조림 확대(50%)로 숲의 재해대응력 강화
 - AI, 인공위성 등 활용 신규조림 적지 발굴 및 부처 협업, 탄소흡수 능력이 우수한 기후적응 우수 수종 공급으로 신규흡수원 확충
 - * 활엽수종 채종원 지속 확대(제주 등 42ha) 및 수변구역, 한계농지에 우수품종 식재(1천ha)
- (국외) REDD+ 탄소 감축 성과 제고 및 개도국 기후위기 대응 강화
 - 라오스, 온두라스 등 REDD+ 협력 체결국 세부사업 이행 및 사업추진 기반 구축으로 현장 중심의 감축 성과 확보
 - * (라오스, 온두라스) 국제 감축 사업 본격화 (‘30년 추정감축량 340만tCO₂, 과학원)
 - * (베트남, 과테말라) 사업 타당성 조사 추진 후 사업 이행 양해각서 체결 논의
 - 글로벌 기후위기·산림재난 대응 선도로 국제 산림문제 해결에 기여
 - * UNFAO와 글로벌 산불관리 허브 주도로 미국, 캐나다, 독일 등 산불 정보·지식 교류 강화
 - * 프랑스와 공동 산불협력으로 아시아 15개국 500여명 산불전문가 양성(‘26~’30, AFoCO 이행)
- (생물다양성) 국가생물다양성 전략(30by30)* 이행을 위한 보전 수단 강화
 - * 2030년까지 육상지역의 30%를 보호구역으로 지정(‘22, UN 생물다양성협약)
 - 보전가치 높은 산림의 보호구역·OECM 지정 확대 및 기후위기 대비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* 보전 관리 강화
 - * 7종: 구상나무, 분비나무, 가문비나무, 주목, 눈잣나무, 눈향나무, 눈측백
 - 기후대별 국립수목원 확충으로 한반도 산림생물종 보전 기반 구축
 - *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착공(‘26.5.), 국립새만금수목원 개원(‘27)

[2. 국산 목재의 고부가가치 이용으로 목재주권 확보]

- (고부가가치 이용) 산림활용도 제고를 위한 국산목재 단계적 이용* 강화
 - * 건축가구 등 고부가가치로 우선 이용하고, 연료 등 저부가가치는 후순위로 이용하는 원칙
 - 산림청-국토부 ‘목조건축 정책협의회’ 등 범정부 목조건축 활성화 기반 구축
 - * 「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산림청·국토부 공동제정 중(24.11. 발의)
 - 공공 목조건축 선도적 확산으로 지역 랜드마크 확대, 미래건축기술 개발
 - * 지역 목조건축 랜드마크 조성(44개소 추진 중), 학교시설 목조화를 위한 적정 시공기술 개발 등
 - 친환경 산림바이오매스의 경제·환경적 활용을 위해 미이용 산림자원화 센터 등 이용 기반을 구축하고,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
- (목재산업) 국산목재 설비 고도화를 통한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
 - 권역별 국산목재 산업거점* 확충 및 노후화된 가공설비** 개선 지원
 - * 목재산업단지(3개소), 산림·목재클러스터(~27) 등 / ** 용자 지원, 신규·교체 사업 발굴 등
 - ‘한木’ 브랜드화 및 소비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온·오프라인 플랫폼 구축
 - * 목재정보서비스 운영, 국산 목재제품 공공조달 확대(조달청 협업) 등
 - 목재제품 품질기준 정비 및 불법 유통 차단으로 국민 안전·산업 보호
- (목재문화) 국민 누구나 목재를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목재문화 확산
 - 대국민 목재문화 확산 및 실내 목재환경 조성으로 목재 체험기회 확대
 - * 산림·목재문화 연계 강화, 어린이집·도서관 등 생활시설의 콘크리트 실내환경 전환 등
 - 국민생활 속 목재이용 확대를 위한 ‘생활 속 탄소중립’ 제도 신규 발굴
 - * ‘국산목재 확인 → 탄소저장량 표시’를 거친 목재제품 이용 시 탄소중립 지원금 지급
 - 산업·문화 연계 및 체계적 성장 지원을 위한 ‘목재문화산업진흥회’ 운영

5 [지역소멸 대응] 찾고싶은 산촌 조성으로 지역상생 기여

[1. 산촌 인구 유입 촉진 및 주민 소득 향상 지원]

□ (정주인구) 도시민 체류 기반 구축 및 산촌 소득모델 다양화

- 도시민의 산촌체험 및 귀산촌 촉진을 위한 산촌체류형 쉼터* 도입
* 산촌체험 및 산림경영을 위한 임시숙소로 '산촌'지역에 설치 허용(산지관리법령 개정)
-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으로 귀산촌 교육·컨설팅 강화 및 정착 지원
* 산불피해지역 산촌의 공간회복, 주민소득 증진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·제공('26)
- 산촌활력특화사업 확대*로 산촌형 소득모델 발굴 및 사업화 컨설팅
* ('25) 18개소 → ('30) 100개소(누계) / (사례) '25년 사업지 매출액 172% 증가

□ (생활인구) 우수한 산림자원을 관광자원화하여 산촌 지역 방문객 유치

- 산림인프라와 지역관광자원을 연계·활용한 숲여행 콘텐츠 개발·홍보
* 명품숲, 산촌마을, 임업인(임산물), 산림휴양시설 등 연계 산림관광코스 발굴
- 숲여행 특화 산촌마을 육성('26~, 5개소/년) 및 운영 주체 역량 강화 지원
* ▲(기반조성) 특화자원 발굴 및 주민 역량강화, ▲(상품개발) 사업화 컨설팅 및 시범운영, ▲(판로지원) 홍보, 마케팅 및 유통 지원 등
- 지역상생형 산림문화 프로그램* 운영을 통해 볼거리·즐길거리 제공
* (예시) 지역축제+산림박람회, 숲속 영화제·음악회·북토크 콘서트, 산림레포츠 대회 등

□ (지역상생) 국유림 활용 산촌주민 소득 지원 및 규제 합리화

- 국유림 보호활동 실적을 충족한 지역주민에게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*
* 송이·능이, 잣, 산나물 등 / 보호활동 인정 기준, 지역주민 범위 구체화 등 제도개선('26)
- 국유림 대부·사용허가 제도개선*으로 합리적인 국유림 활용 기반 마련
* 경제림육성단지 내 풍력발전 기반시설 설치 시 국유림 대부 기준 현실화, 산양삼 재배 목적 사용허가 시 지역제한 완화 등

[2. '5극 3특' 중심 지역특화 산림 인프라 확충]

□ (정원확충) 자연·문화 기반 정원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명소 확대

- 국가정원을 '5극 3특' 권역별 최소 1개 이상 지정하여(수요조사, 2월~) 정원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
-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자연을 반영한 지방정원 조성 확대
 - * 지방정원 대상 품질평가제도 확대 및 단계별(조성·운영·관리) 맞춤형 컨설팅 제공
- 정원박람회 확대* 및 국제정원박람회 개최('28, 울산)로 지역경제 활성화
 - * ('25) 경남 진주 1개소 → ('26) 부산, 영월, 청주, 전주, 거창, 제주 6개소

□ (숲길활용) 중앙·지방정부가 함께 소통하는 산림 인프라 조성·관리

- 동서트레일 시범운영·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고 지역이 참여하는 체험 활동 기반 마련 및 이용 편의 개선
 - * 동서트레일 이용 APP 개발, 구간별 스토리텔링 발굴 및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
- 지역 주도 국가숲길(9개소) 활용을 위해 숲길 거버넌스(중앙·지방 정부, 주민, 기업 등 참여) 구축 및 이용자 쉼터 등 기반 시설 확충
 - * 국가숲길 중앙·지역협의회(10개, 연 2회), 동서트레일 지속가능발전 협의회(연 4회) 운영

□ (주민참여) 주민이 직접 정원을 조성하고 가꾸어 지역 공동체 활성화

- 지역 환경을 고려한 정원도시를 조성(12개소)하고 마을이 참여하는 운영·관리를 통하여 지역 공동체 회복 등 삶의 질 향상 유도
 - * (계속) 인천, 대전(2), 세종, 충주, 전주, 해남, 신안 / (신규) 영월, 제천, 청주, 안동
- 수목원·정원 조성·관리에 필요한 식물을 지역 임·농가에 위탁 재배하여 지역주민 소득 증진 및 일자리 창출
 - * (사례) 봉화군 백두대간 수목원 44 농가, 세종시 세종수목원 48 농가 위탁재배 계약

IV. 주요 쟁점이슈

① 산림사업 공개경쟁 확대 및 품질 제고

- (현황) 산림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‘선진화 TF’ 운영 및 제도 개선으로 경쟁계약이 확대되고 있어 이를 가속화할 필요
 - * 국유림 산림사업 공개경쟁 계약 비율: (‘24) 16.6% → (‘25.10월) 37.1%
- (쟁점) 산림사업 현장에서 사업품질, 사후관리, 사업시기 제한 등으로 수의계약을 선호하나, 경쟁입찰을 통한 산림사업 추진 요구 확대
 - 재해안전성 확보 등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나 대부분의 산림사업법인이 영세하고 지속성이 부족
 - 최저가 경쟁입찰로 진행 시 사업체 지속가능성 담보가 어려우므로 시공능력·사후관리 능력이 검증된 업체 간 경쟁할 수 있는 제도 필요
 - 대표적인 산림병해충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경우 매개충 특성상 4~5월까지 방제를 완료해야 하는 사업기간의 제한과 시급성 존재
- (향후 계획) 산림사업 경쟁체계 전환으로 투명성 및 사업품질 제고
 - 산림사업 사업주체 간 역할 재정립으로 상생발전 도모
 - * (산림조합) 산림사업 관리 기능 중심으로 전환 추진
 - * (산림사업법인) 장비·기술력 등 시공능력 평가 도입으로 우수업체 육성기반 마련
 - 산림사업 계획성 강화 및 비용 현실화로 품질 중심 사업체계 구축
 - * 다년·규모화 사업으로 전환하여 계획의 내실화 및 설계·시공의 책임성 강화
 - * 능력있는 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지방정부의 지역제한 입찰제도 개선 필요
 - 산림사업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산림사업 품질 제고
 - * 감리·별점제도 실효성 강화,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 합동 모니터링 확대

② 산림경영의 재난 안전성 강화 및 신뢰성 확보

- (현황) 국무회의·간담회 등 산림경영 논쟁 후속 조치로 산림사업의 과학적 근거 보강, 사업 품질 제고를 포함한 근본적 혁신 필요

- ▶ 국무회의 등 논의: 제31회 국무회의 1차 토론(7.15), 장관 주재 간담회(7.29, 8.4), 산림경영 논쟁 국회토론회(8.5), 제36회 국무회의 2차 토론(8.12)
- ▶ 자체대응: 산림정책 현안대응 TF(9~10월, 3개분과 8회 회의), 산림정책 혁신위원회(9~12월) 운영을 통해 산림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내부·외부의 의견 수렴 실시

- (쟁점)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확대되어야 하는 숲가꾸기·임도 등 산림경영에 대해 사회·환경적인 비판 제기

- ▶ ① 모든 산림경영 활동이 산림재난 위험을 높인다는 주장과,
② 특정 시점사례에서는 인위적 개입이 자연재해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이나 모든 산림경영이 산림재난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공존
- ▶ 양측 모두 산림자원의 조성과 활용, 탄소중립을 비롯한 공익적 가치, 산주·임업인 권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 → 산림경영은 필요하나, 재난 안전성 등 품질 보강 필요

- (향후 계획) 산림경영의 재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산림정책 추진
 - 품질 중심의 임도 정책 전환으로 안전하고 연결성 있는 임도 확충
 - 예정 노선 내 토지 수용·사용 등 임도의 체계적 설치 및 관리를 위해 「임도설치법」 제정 추진('25.1월, 의원 발의)
 - 기본설계 제도 도입으로 설치 대상지의 지형, 작업 난이도 등을 고려한 대상지별 사업비 현실화 추진
 - 혼합림 조성 확대, 경제림 내 산림사업 집중 및 목재수확 위험도 평가 도입 등으로 산림경영의 안전성 제고
 - 산림분야 갈등 발생 예방을 위한 대국민 산림(경영) 교육·홍보 강화